

3D프린팅, 세계시장 점유율 15%로

국과심, 발전전략 심의·확정 ... 중소기업 지원에 도서관·주민센터 설치

정부는 제조업 혁신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3D프린팅 산업 육성에 앞장선다.

정부는 4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손쉽게 실현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사회 전반에 퍼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과심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심의·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D프린팅 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조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영세·중소기업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이 손쉽게 3D프린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과학관·도서관 등의 무한상상실과 주민센터에 3D프린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3D프린팅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대학 등에 3D프린팅 교과과정(커리큘럼)을 개발해 실무형 교육을 추진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 실습용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D프린팅 원천·융합 기술을 개발해 2012년 최선도국의 6.3% 수준에 불과한 3D프린팅 분야 특허출원 비중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5개를 육성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3D프린팅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민관협동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와 3D프린팅 산업 발전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4>